제8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5년 4월 25일(금)
15:00~17:00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주제발표】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종합토론】
박노벽(前 주러시아대사)
최윤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W-아카데미 원장)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유영철(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포럼기획 : 전쟁기념사업회 학예부
작성책임 : 서진아 학예연구사(02-709-3046)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8회 KWO 나지포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제8회 KWO 나지포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15:00~17:0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 록	14:30~15:0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 회 식	15:00~15:10	• 개회사 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
주제발표	15:10~15:40	【사회】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발표】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 변동과 종전(終戰) 협상
종합토론	15:40~16:10 (다자토론)	【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W-아카데미 원장)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유영철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16:10~16:20	【Q&A】 질의응답
기념촬영	16:20~16:30	기념촬영
리 셉 션	16:30~17:00	환 담
폐 회	17:00	폐회 선언

〈목 차〉

【개회사】 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 회장) ····· 6

【주제발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 변동과 종전(終戰) 협상: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신범식 ····· 9

Ⅰ. 머리말 ····· 11

Ⅱ.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영향 ····· 12

Ⅲ.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전개 ····· 18

Ⅳ. 한국 외교에 대한 도전과 대응 ····· 26

【종합토론】

박노벽(前 주러시아 대사) ····· 33

최윤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W-아카데미 원장) ····· 41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 43

유영철(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47

다자토론 ····· 50

개 회 사

백 승 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2025년 제8회 KWO 나지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표를 준비해 주신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님,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님,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님, 유영철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국제정세의 불안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공조를 통해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이처럼 급변하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올바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한반도 안보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주변국의 안보 환경에 비추어 전망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석학들의 진단과 제언들이 큰 울림이 되어 우리나라,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전쟁기념사업회에 부여된 전쟁 예방과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데 앞장서서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번 나지포럼은『월간 신동아』에서 대담 내용을 정리 게재할 예정이어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끝으로 전쟁기념사업회 나지포럼에 참여해 주신 석학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 변동과 종전(終戰) 협상: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신 범 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Ⅰ. 머리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드높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미국은 나토(NATO) 무용론이나 북대서양 조약 제5조 집단방위조항의 조건적 적용 가능성 제기하면서 주독 미군 감축을 시도한 바가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밀감 표시는 대서양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런 트럼프가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과 빠르게 협상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줄일 가능성을 공공연히 표현하였다. 미국의 러-우 전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공약이 내포하는 국내 정치 우선성은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축소할 가능성 있다. 이런 전망은 실리적 거래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와 경제 지원을 축소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협상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간의 종전 협상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가며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한 것은 러-우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과 관련해 큰 주목을 받았다. 켈로그 특사는 전선을 현재 위치에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러-우전의 종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높아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감소나 영토 양보 추구는 푸틴의 공격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토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이런 양보는 러시아가 재무장하여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러시아로서도 어정쩡한 휴전은 우크라이나 재무장의 기회가 되어 새로운 전쟁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러-우 사이 작용하게 될 강력한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것도 큰 과제이다. 이런 과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라는 강력한 채찍과 함께 미국이

부담하지 않는, 결국 유럽이 주로 부담하게 될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을 당근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되는 형태로 전쟁이 종결된다는 당근에 못지않게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채찍을 지렛대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재'가 트럼프의 대러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러-우전 관련 대러 제재는 서방의 단합을 통해 이루어진 다자간 노력의 결과였다. 비록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우회로가 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기는 했지만,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였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에 가할 수 있는 압력으로서의 효용이 여전히 있다. 또한 서방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특히 금융 기관 관리와 더불어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제재와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재는 채찍인 동시에 그 해제는 큰 당근이 될 수 있다. 미국 내 법적 장치로 인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다. 특히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제정된 '제재를 통한 적대국에 대한 제어 조치(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는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때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우위를 점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할 가능성은 그 전 바이든 행정부 시기보다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미·러 관계는 그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으며, 그 초점은 역시 러-우전 해법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두 이슈에 집중되고 있다.

II.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영향

러-우전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이 전쟁이 종전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국제 정세에 어떤 지정학적 영향을 끼쳐왔으며,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제적 영향

국제질서 변동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외교 전략적 대응이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외교 전략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우선 유럽 안보 체제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인정하고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다극적 국제질서 도래라는 현실에 조응하여 러-우전 종결을 추구하고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럽 안보 질서가 전환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군사·경제적 지원을 보류·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토(NATO)의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촉구하면서 GDP 대비 최소 3% 이상의 방위비 지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미국 정책의 변화는 기존 나토의 긴밀한 동맹 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막대한 군사적·외교적 비용을 요구하는 충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과 국제 규범, 나아가 국제연합 체제의 미래에 근본적 변화까지도 가져와 서구의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 내에서는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주요 국가들과 폴란드, 핀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 간 위협 인식 및 대응 전략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대적 전환점(Zeitenwende)"으로 규정하며 국방 예산을 GDP 2% 이상으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독자적 유럽 안보 체제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와 핀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신속하고 강력한 군 현대화 및 병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공동 방위 산업 육성과 병참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자체적인 핵억지력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폴란드와 발트 3국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 지원을 줄이고 조기 휴전을 압박할 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미 관계, 러시아 위협 인식, 안보 전략 등에 관해서 분화와 균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미국이 나토에서의 역할을 실제로 축소하거나 심지어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독자적 군사력과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전쟁은 유럽 안보 질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편이라는 국제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와 외교적 단절로 인해 서방 영향력이 약화하였으나, 중국, 이란, 북한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러시아와 서방 양 진영 사이에서 실리적이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서방의 제재 효과는 완화되고 러시아의 전쟁 지속력은 더욱 높아졌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이러한 독자적인 외교 행보는 이 세력이 냉전기와 같이 국제정치의 단순한 주변부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단순히 유럽 안보 지형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21세기 글로벌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 동북아에의 영향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 질서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분쟁 구도의 재연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외교·안보 전략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동맹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였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적 지역 질서 구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서방 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러시아 강경노선의 완화와 더불어 동북아 신냉전 질서의 변화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도로 추진되었던 군사협력 체제, 흔히 “아시아판 나토”라 불리는 한-미-일 간 삼각 협력 틀이 예상만큼 빠르게 강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들어 미국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발전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며, 그런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junior partner)’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행보는 동북아 내 세력균형의 변동을 적절히 이용해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극동 개발과 유라시아 횡단 인프라 연결에 지속적 관심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유라시아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중국 또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 협력을 유지하겠지만, 북-러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북한이 러시아 영향권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상황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러시아에 과도하게 밀착할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의 정책 공간이 오히려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후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제약되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자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협력 내지 경제 협력의 구도에서 러시아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세심한 조율을 계속해 가려 할 것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충격은 동북아에서 기존 미-중 중심의 양강 구도를 더욱 복잡한 다층적이며 다극적인 질서로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신냉전 식으로 블록을 구축하려 했던 시도가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러시아는 북한과의 신조약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부각하며 역내 '균형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포함한 우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북한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국을 넘어 지정학적 협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안은 2024년 6월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후 양국 간 협력이 군사·경제·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러시아가 대북 관계를 지정학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파병했으며, 2025년 봄, 현재 누적 파병 규모는 1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기여는 북한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교섭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은 에너지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협력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현재까지 관측된 러-북 관계는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계기로 단기간에 긴밀해진 군사·경제 협력은, 러시아의 아시아 균형 전략을 고려할 때 중

장기적으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규모 병력 파병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에너지 지원 등 상호 의존적 협력은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러 협력 관계가 북-중-러 삼각관계의 맥락으로 연결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러시아의 대북 기술 지원 확대가 중국의 전략적 불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로 북러 무역액이 북·중 무역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군사·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는 중국의 안보 우려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북-러 관계를 중국이 끌어안기에는 동북아에서 중국이 고려해야 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러-북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여러 국제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면,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과의 전략 협력을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러시아가 제재 해제의 여세를 활용하여 대북 지원 폭을 넓히거나, 그 반대로 지원 여력을 다른 우선순위로 돌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중 관계나 중-러 관계에서 갈등 요소가 두드러질 경우,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이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여지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러 양측 모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정과 러시아의 극동 개발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충족함과 동시에,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 안보 지형에도 지속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러-북 관계는 단기적 이해관계와 중장기적 지정학적 이익이 맞물리는 복합적인 차원에서 전략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주변국 외교·안보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해 보면, 국제적 다극화 추세의 지역적 반영과 세력 균형점의 변동 국면에서 동북아시아 각국은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억제하거나, 혹은 반대로 군사협력을 가속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동시에 보이는 복합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질서는 명확한 진영 재편의 양태를 보이기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진이 빚어낸 상호 견제와 전략적 유연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균형점의 조정과 그에 따른 각국의 대응 포지션의 변화가 모색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대응의 필요와 방향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기조에 맞게 대러 제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나토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이었다. 한국의 적극적인 대러 제재 연대 참여는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보복적 대응조치를 초래했으며, 삼성, 현대, 엘지 등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양국 직항 항공편이 차단되어 인적·물적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러 관계의 악화와는 대조적으로 북-러 밀착은 한반도 정세와 한국 외교에 중요한 도전을 구성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포탄 지원은 북-러 군사적 밀착을 의미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의 변화를 자극하였고, 이것이 2022년 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폴란드를 통한 포탄 우회 지원 결정을 내린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를 한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러관계는 더욱 악화하였다.

결정적인 변화는 2024년 6월 푸틴의 북한 방문과 군사 재동맹 성격의 '러·북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신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러-우 전쟁 동안 심화한 지정학적 갈등(서구와 러시아 사이)을 비롯하여 북-러 밀착 문제, 제재 참여와 그에 대한 보복 조치, 군사 및 안보 우려 등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중재적 역할 수행 가능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감도 지닌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대러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 변화는 외교 노선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국내 정치의 변동은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은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될 경우 이는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동성을 크게 할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실용적 외교를 구사할 수 있는 기민한 외교적 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내 한·중·일 채널과 같은 소다자 채널의 적극적 활성화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북한 접근 과정에서 한국 패싱의 우려도 불식하여야 한다. 이런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적 대응에서 러시아는 한국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과거부터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쌓아온 협력의 틀이 있다. 또한 지정학적 현실주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적 핵심 과제인 한반도 평화 구도 정착과 통일은 러시아와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 분단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동시에 통일의 여정에서 기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비토 세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한 정세 속에서 우리 외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열리는 기회에 대한 긍정적 자산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차원에서 훼손된 한-러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결과가 규정하게 될 국제질서 변동의 방향에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Ⅲ.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전개

1. 러시아의 전쟁 지속능력 평가

러-우전의 종전 협상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앞서 예측을 위한 변수의 폭을 줄이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전쟁 지속능력,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내구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예상외의 회복력과 내구력을 보여주었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2년 초기 충격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2023년에는 3.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4.1% 성장하였다. 그리고 2025년에도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이러한 회복력은 여러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 재편이다. 러시아는 군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24년에는 13.5조 루블(약 1,32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를 배정했으며, 이는 정부 지출의 약 1/3을 차지하

는 규모이다. 이러한 군사 중심의 지출 증가는 일종의 '군사 케인스주의(Military Keynesianism)' 효과를 가져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긴축이다.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병력 동원과 징집, 그리고 일부 러시아인들의 해외 이주로 인해 러시아의 실업률은 전쟁 초기 8%에서 2025년 현재 2%대까지 하락했다. 이는 옛 소련 붕괴 이후 최저 수준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실질 임금은 2022년 4.5%, 2023년 5.8% 상승했으며, 2024년에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전쟁 수행으로 발생하는 군사적 손실을 상당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통계에 왜곡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2025년 3월 27일 기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의 인명 손실을 약 908,89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장비 손실로는 탱크 10,438대, 장갑차 21,701대, 포병 시스템 25,265대 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에만 탱크 1,400대, 보병전투차량과 장갑차 3,700대를 잃었으며, 이는 2023년 손실(3,000대)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2024년에 소련 시대에 사용하던 장비를 개조하고, 신규 생산을 통해 1,500대의 탱크와 2,800대의 보병전투차량/장갑차를 공급하여, 손실된 탱크의 대부분과 장갑차 손실의 3/4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성도 전쟁 지속능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선거에서 87.3%라는 전례 없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여당인 통합러시아당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른바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로 인해 러시아 사회는 전쟁 기간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욱 결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서방의 기대와 달리, 제재와 전쟁 부담이 푸틴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은행에서도 2023년에 러시아의 구매력평가기준(PPP) 국내총생산을 일본(5위), 독일(6위)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이 같은 러시아 경제의 성과는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한편, 군수산업을 필두로 수입대체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내수 경기가 진작되고 있으며, 동시에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일부에서 전시 경제의 착시효과라는 지적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의 문제와 1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는 높은 이자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사실 전시 경제의 압박 속에

서 러시아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도 안게 되었는데, 우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8 ~ 10%대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1%까지 인상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9.2 ~ 9.3%로 예측했지만 실질 임금 증가도 9%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고 있다. 군비 예산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부담 관련해서도 푸틴 5기 출범 이후 단행된 누진 소득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조치로 발생하게 될 2조 6천억 루블의 추가 세수 덕분에 향후 전쟁 비용 충당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2025년 1월 기준 러시아에 대해 16,000개 이상의 제재가 부과되었으며, 러시아 금융 시스템 자산의 약 70%가 제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인도, 터키 등 우호적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시스템 대신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각국 통화(Local Currency)를 통한 결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러시아는 제재의 즉각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

결국 자원과 식량에서 완전한 자급이 가능한 러시아가 전쟁을 계기로 점차 제조업의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점차 주권적인 자족경제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완만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해 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가운데 러시아 경제는 전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불식시키며 성장 기조를 단·중기적으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기초하여 적어도 2년 정도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크게 과도한 예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푸틴 5기 들어 기존 안보전문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경제전문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로 교체된 것은 장기적 소모전에 대한 대비와 전시 경제 관리의 전문성에 대해 러시아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러시아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경제·군사적 자원을 계속 보충하며 전선 손실을 신속히 보완하고, 내부적으로도 '안보결집효과'를 활용해 정치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장기화한 서방 제재, 전쟁 장기화로 인력·자원 소모가 누적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일부 반전 여론이 감지되고 있으나, 정부는 언론 통제와 정치적 억압을 통해 대규모 저항을 억누르고 있어 체제 붕괴 징후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러시아는 견고한 내구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으리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러시아의 전쟁 지속능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게 한다. 결국 러시아 국내 정치의 안정성과 전시 경제의 성공적 관리는 향후 종전/휴전 협상에 임하는 러시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자신감이 최근 전선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공세적 입장과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임하는 러시아의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전개와 전망

과연 세계가 기대하는 러-우전이 조속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을까? 2025년 러시아 관련 정세의 초점은 단연 러-우 전쟁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조율이 얼마나 가능하겠냐는 문제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주요 관련 국가들의 입장

우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초기의 목적을 고수하고 있다. 키스 켈로그 특사의 지명과 관련하여 크렘린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러시아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폭넓게 동의할 수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가입을 포기해야 하며, 현재 러시아의 점령지를 대거 양보하는 조건은 배제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협상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현 점령지 인정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고수하면 어떤 형태의 협상도 시작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판단하에 러시아의 선호를 정리해 보면, 러시아는 서방에 의한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속히 중단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조건을 수용하고 협상에 나서는 상황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인다.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는 정도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적극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한 요구 조건은 전술한 바처럼 러시아가 관련국 중에서 무력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스스로 판단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뜨거운 국면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가 나토의 우산 아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나토 가입만 성사되면 영토를 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설혹 나토 가입이 안 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 조약 체결, 나토군의 주둔 내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다소 진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서방에 의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강한 열망이 러시아의 조건과 충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를 지속해 가려는 입장이다. 만약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이 줄거나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꾸준히 발전시켜 온 자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최대한 높여서 저강도의 비정규적 투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이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럴 때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키스 켈로그 특사는 2024년 봄, 출간한 저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값비싼 선행의 과시일 뿐이라며 휴전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 시각을 피력한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에 참여하게 만들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런 시각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입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미국은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고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의 입장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신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우 코스타는 취임사에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며 영토 탈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안전판으로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유럽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과는 다른 유럽의 안보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할 때 러시아 군사력의 소진을 가져오는 한편, 유럽국들이 자강을 위한 군비

를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건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종전/휴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은 독자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럽의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과 유럽 내 러-우전에 대한 분열된 입장 때문에 확대된 지원을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 압력으로 유럽이 소극적으로라도 협상을 지지하고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2) 종전 협상 선택지와 시나리오

[표 1] 주요 행위자들 입장과 수렴지

협상 선호 / 서방 지원 관련 선호	적극적	소극적
지원 중단	**A: 종전/휴전 협정 체결** 러시아(22~25)① 미국(트럼프 2기)①/유럽(25~)②	**C: 테러전/게릴라전** 러시아 (25~)② 우크라이나(25~)②
지원 축소유지	**B: 긴 협상 과정** 미국(트럼프 2기)②	**D: 저강도 분쟁** 유럽(25~)①
지원 유지	**E: 분쟁/협상 병행기** 우크라이나(25~)① * 2022년 2월~4월 양상	**F: 고강도 분쟁(22~25)** * 2022년 4월~현재 양상

이런 관련국들의 기본 입장들을 검토해 보면 휴전/종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의 두 축은, 첫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유지(가능) 여부이고, 둘째는 전쟁을 종결하는데 대해 무력 수단보다 협상 수단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두 조건과 관련된 관련국들의 일관성 및 변화 가능성의 선호들을 조합해 보면, 향후 전쟁 전개의 선택지를 [표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대한 강한 선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당연히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일관되게 선호하지만, 협상을 적극 활용하되 여의찮으면 무력 수단을 통한 분쟁의 해결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서방의 군사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협상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선호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그 능력에 따른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선호의 일관성과 변화 가능성을 조합해 보면 여섯 가지의 입장 수렴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하고 러·우 양측이 강한 무력 충돌을 진행하면서도 평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던 전쟁 초기의 상황(E)은 매우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협상에 대해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이 전쟁을 고강도의 열전(熱戰) 상황(F)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강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지속력을 해체하려 했던 서방의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 전쟁은 장기화하게 되었다.

이런 전쟁의 흐름을 변화시킨 가장 강한 변수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종전 의지는 러시아의 입장을 변화시켜서 2025년 3월부터 선택지 A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수렴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그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광물 협정을 제안하였다. 미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미국 사업의 우크라이나 내 존재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방파제로 만들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전쟁 조건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물론 미국은 이를 통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3,500억 달러의 전비를 보상받는다는 계산도 그 뒤에 깔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경제적 연루를 넘어 추가적 보장을 요구하는 젤렌스키의 입장은 지난 3월 백악관 회동에서 트럼프와 충돌하면서 광물 협정 조인을 위한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였고,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런 미국의 압력에 동의하기 위해서 추가적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주요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 전면적 휴전 이행, 다국적 군부대의 참관, 우크라이나를 위한 효과적

안보 체제 구축 등의 단계적 안전보장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중요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선택지** B와 같이 협상이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정책 지향이 종전에 있는 만큼 이 선택지에서 오래 머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유럽이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전쟁을 지원할 경우, 이에 고무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선택지** D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의 지원 여력은 6~8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력은 빠르게 고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선택지** E 상황이 그나마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고, 유럽의 축소된 지원만 받게 되면 **선택지** D 상황에서 저강도 분쟁을 이어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유럽의 지원 여력 한계로 그나마 여의치 않을 경우 전쟁 동안 발전시켜 온 무기 생산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전 대러 항전을 지속하는 선택지 C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러시아는 무력 대응으로 이에 대응하며 전쟁이 비대칭/비정규 전쟁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리해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러-우전의 향방은 2025년 4월 현재 **선택지** A의 가능성이 커져 있지만,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종전안이 실패하면 **선택지** B, D, C 상황으로의 전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럽이 러시아의 호전성에 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미국도 이에 합류하면 선택지 D가 F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종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인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적절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타협안을 찾아냄으로써 휴전/종전 협상이 조만간 결실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IV. 한국 외교에 대한 도전과 대응

1.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응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 관련된 변수가 많아서 정교한 예측이 쉽지 않지만,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단순화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현 단계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이 분명하며, 이 시도의 성패에 따라 종전 협상과 그 이후 사태 전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트럼프 제안의 실현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제안을 수용해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에 의한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한편, 러시아는 자국 세력권을 안보적으로 지키고 제재 해제에 따른 이익을 챙기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력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중단기적으로 한국에게 기회와 도전 요인을 모두 보여준다. 미-러 간 전략적 소통의 회복은 동북아에서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등장과 세력 균형점의 변동을 추동할 수 있으며, 미국이 러시아의 암묵적/명시적 지지 속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사태의 전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이 상황에서 한국 위상과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내용을 공고히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트럼프 제안의 실패이다. 이는 유럽이 안보적 목적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유럽은 미국이 없는 유럽 안보 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에 나설 수 있으며, 나토 동맹 구조의 균열을 확실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유럽의 군사적 지원 여력은 반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은 러시아의 확전과 유럽 대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 될 것이므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쟁이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유럽의 제한적 지원에 의지해 우크라이나가 비정규전 위주의 저강도 분쟁을 장기화하는 선택지가 남겨질 수도 있다.

어느 때이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동북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조율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미-북 접근이 어떻게 시도되는지 예의 주시하며 적실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동북아시아 관련 논의에서 패싱되는 사태는 피해야 하며,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2. 한국의 적극적 외교의 필요성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전략 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과정은 한국 외교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는 현재 탈-탈냉전기라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과거의 냉전기 및 탈냉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진영 간 경쟁과 긴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미-중 갈등과 더불어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이 이러한 진영 대립을 고조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러시아가 보여주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외교 전략과,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지정학적 중간국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국제정치의 변화 양상이 단순한 진영 대결로만 분석될 수는 없다.

도리어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국 국내 정치의 격동이라는 조건 하에서 2025년은 한국 정부는 주변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구도 변동에 예의 주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한국 대 북한' 내지 '미국 대 북한' 관계의 악화를 관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대한 깊은 전략적 관심을 가진 나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협력 수준에서 최고 밀월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감도 지니고 있음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특히 인구 희박 지대인 시베리아-극동 지역으로 몰려드는 중국인들의 인구 삼투압 문제와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에 대한 우려는 러시아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드높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자 일본 그리고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국의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관심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종전/휴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주요 분쟁지에서 국익을 거래할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은 주요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일방의 완전한 적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와 민주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지와 지원을 견지하되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러시아도 한국이 자국에게 필요한 나라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급변 정세에 대응하는 카드로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와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의 실패 경험을 우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의 지지에 의존하며 러시아를 개입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과 조정의 정책 채널을 신속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 미국의 거래로 미국과 북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다면적 대응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존 그리고 통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는 하지 못했지만, 언제든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면, 트럼프 복귀 이후 미국 정책의 변화는 북-러 전략적 협력의 회복을 격동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러시아가 감당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이처럼 다양한 상황 전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한-러 전략적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내용을 새롭게 채워나갈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러 신조약을 단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러 간의 협력이 고도로 적대적이며 배타적인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러시아가 지역 내 균형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러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북-러 관계의 성격이 '편의'적 협력에서 보다 구조화된 '전략적' 협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며 한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정세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외교는 이 같은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적 사고를 펼쳐야 한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한-중-일 대화의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에도 힘을 쏟음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북-러 신조약 이후 미묘한 세력 균형점의 변동에 따른 지역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의 북한 비호 아래 북-미 접근이 한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런 시도를 한국의 역할과 주도성을 증진시켜 나가는 동해안 협력 벨트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기회로 포착해 내는 창조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연 외교와 균형 외교를 넘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외교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끝〉

종합토론

【토론자】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W-아카데미 원장)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유영철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토론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박 노 벽 (前 주러시아 대사)

1. 전쟁 상황

1) 전선 상황

가. 러시아는 전쟁의 패배나 완전한 승리 없이 소모전 지속

- 초기에 점령 영토 일부에서 상당 후퇴했지만, 전사자 및 부상자 80만 명 발생에도 2023년 말부터 동부 지역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과 함께 북한군 지원으로 러 본토 쿠르스크 회복

나. 우크라이나는 유럽 지원하 주권 독립국가로 유지

- 러시아의 침략에 전면적으로 저항으로 러시아 군대가 영토 점령시마다 큰 대가를 치르게 했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능하는 주권 국가로 존속.

다. 제한적 휴전(3.18~4.18)의 효과퇴색으로 전쟁의 종결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

-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단 가능성과 미국의 안전보장 미제공 (4.11 켈로그 미국 특사)

2) 러시아 내부

가. 전쟁, 경제 운영

(1) 크렘린은 초기 "특별 군사 작전" 이라 불렀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제 실존적 투쟁으로

규정하며 목표를 확대

-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무너지지 않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전쟁을 방어적 성격으로 묘사하며 국민들을 통제, 단속, 경고
- 크림반도 외 4개 우크라이나 주 합병 이외에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제거와 키예프 정부 교체 요구는 전쟁 종결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정치적 취약성과 군사적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
-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승리 가능성이 없어도 상당 기간 철수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

나. 에너지 수입금으로 전쟁 및 경제 운영 중이나 장기 발전 회복 전략 부재

- 금년 계약직 군인 동원 시 지원금 (일시불 1만 불 이상) 파격 인상

3) 우크라이나 내부

가. 드론(4백만 대 생산), 포탄 등 자체 무기 생산(40% 충족)과 유럽 지원하에 감내

- 25세 이상에 국한 동원하여 병력 부족 보완을 위한 조치 강구 필요

나. 트럼프의 경제적 대가 요구 대처

(1) 젤렌스키는 2024년 9월 광물 활용 미국의 지속적 지원과 안전보장확보를 기대

- 트럼프는 미국 이익을 위해 키이우에 대한 안전보장은 제외하면서, 경제적 독점적 지배를 요구하여, 키이우측은 균형적 타협 방안을 위해 고군분투

(2) 미측의 수정제안은 우크라이나 내 중요한 광물, 석유, 가스에 추가, 항구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관련 인프라를 포함한 천연자원 프로젝트 수익의 절반 50%를 미국이 통제하는 투자 펀드에 기부 요구

- 4.17 "공동경제파트너쉽협정"의 양해각서 서명 후 정식서명에도 불구, 미국의 종전 노력 중단 시, 상기 협정의 의미 퇴색 예상

2. 트럼프의 거래 전략

1) 핵심 방식

가. 강대국 요구에 중견/약소국은 수용(굴복)

- 강대국인 러시아의 요구에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저항하여 전쟁 발발

나. 강대국 간 갈등관리: 러중관계에 역 닉슨식 전략적용

-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 견제/저지 목표
- 루비오 국무장관,
  2.25 "러중관계의 이완 관리, 핵보유국인 러중 간 분쟁상태는 좋지 않다"

2) 트럼프, 조만간 종전 합의 미도달 시 중재 노력 종료 가능성 언급

가. 트럼프, "어느 일방이 협상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협상 중재 그만할 것(pass)이나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압박

(1) 4.17 파리에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등 정부 인사 간 회의에서 러-우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골격 입장 차 해소에 실패(점령지 합병인정, 키이우의 나토(NATO) 가입의 가능성 유지 등), 런던에서 추가 회의 예정

(2) 루비오 장관, 4.18 (프랑스 방문 직후) "미국은 며칠 내 종전(평화) 실현 가능성 부재 시, 미국의 휴전 노력을 종료하고,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할 것, 어느 일방도 이 전쟁을 신속히 종식시킬 군사 전략적 역량이 부재, 유럽의 대 러제재 해제 기대 등"

(3) 트럼프 취임 후, 100일째(4.30) 즈음 종전 협상 진전 미비로 포기 시, 유럽의 안보 부담 증대

나. 트럼프는 미러관계 개선을 전쟁 종식보다 우선순위로 추진:

(1) 러, 중, 이란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여건 조성

(2)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안보 보장에 대한 소극적 입장

⑶ 이란 핵문제 해결 시 러측면 지지 기대,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

⑷ 지정학적 이익 중시:

- 미국의 요구에 파마나(운하 소유권), 덴마크(그린란드)는 수용하거나 거부 시 압박과 무력 행사 불배제

3. 트럼프의 방식으로 종전 달성이 어려운 이유

가. 러-우 간 전쟁 목표 격차

⑴ 현 전선에서 동결

⑵ 크림반도 등 5개 지역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공식화 : 키이우 금지선

⑶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영구 포기 :키이우 금지선

⑷ 키이우의 군대 유지: 러시아 반대

⑸ 유럽의 평화유지 군대 파견과 역할 문제: 러시아 반대

⑹ 대러 제재 해제: 유럽 반대

- 루비오, 라브로프와 통화 시 유럽 역할 및 제재 해제 연계 감안 공히 인정 요구

나. 러시아의 대응 전술

⑴ 시간지연, 최대한 유리한 입지확보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권 확립을 위한 점령지 확장

⑵ 중국, 북한, 이란과의 반서방 연대 노선 유지:

- 트럼프 이후 미국행정부의 대러 정책 변동가능성 고려

⑶ 반러 유럽에 대한 각종 보복 조치 :

- 하이브리드 공격(사이버, 사보타지, 선거 개입 등)

다. 미 유럽 관계 변화와 대러제재의 해제는 유럽협조 불가결

⑴ 트럼프의 동맹정책 변화와 유럽연합에 대한 적대감 표시로, 유럽의 자체 방어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대와 미 사령관 부재 대비 나토조직 운영 개선

- 9개월간 순환 배치 미군병력감축 전망, 미국의 핵확장 억지력 신뢰 문제 제기

(2) 영, 독, 불 등 주요 유럽국들은 2014년 이래 경험 기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대러제재 및 압박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 유럽 일부 국가의 러 가스 공급 재개 등 경제협력 재개제기, 극우전당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견 제시

3. 러시아와 유럽의 미래

1) 러시아의 미래 변화가능성

가. 푸틴 체제하에서 군사적 과잉투자, 첨단기술 접근성 감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한 인구통계학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국가 발전의 장애와 사회불안 요소 만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나. 기존 크레믈린 지지 권력층은 군사·정보·법 집행 분야로서 전쟁에 깊이 관여,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푸틴을 후원해 온 후계자들은 즉각적으로 현 정책 노선과 단절할 가능성은 적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하게 전 환하려 하지 않을 것

- 에너지 수출과 군사 방산 의존 경제 지속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 동력과 여건 부재

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미래에 재앙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무제한의 반서방 대립 유산을 점진적으로 해체, 수정할 가능성

2) 유럽의 과제

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등 불안정 해소 역할 여부

(1) 키이우의 유럽연합 및 나토가입을 통한 통제 등 안정유지와 유럽-러시아 관계간 안보 경제 안정화 방안 모색 문제

(2)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지원 문제

나. 유럽정치 지도자들의 대러 평화공존 입장 제시 가능성 여부

- 현재로서는 러의 추가 침공 대비를 강조하는 추세

4. 국제안보의 고차원 도전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1) 미국의 우크라이나전과 유럽안보에 대한 입장 변화를 거울삼아 대비책 마련: 미국의 대중 견제 치중과 강대국 중심 전략의 안보상 도전과 기회 제시

가. 신냉전적 대립에서 다극적 경쟁 질서 도래 대비

(1) 세계 질서 재편 방향의 다극화

- 미국 중심 자유 진영이 단합, 러, 중, 이란, 북한 연대와의 대립하는 신냉전식 양극 체제에서 미국이 중, 러, 이란 간 관계를 이완시키고자 대서양 안보협력을 중시하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 노선을 추구시, 미중과 함께 다극화된 관계로 불안정과 긴장 고조 가능성.

(2) 트럼프 전략과 관세부과 무역전쟁의 역효과 시 세계적 영향력과 위상 축소로 공백에 중국 역할이 증가할 가능성

- 미국이 중국 견제 및 고립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분담금 증액에 치중하여 동맹체제를 집단적 역량의 증대로 활용이 아니라, 편의상의 제한된 종속관계로 간주하면서, 무차별 관세 부과로 경제적 고립주의를 지속한다면, 강대국 경쟁에서 어려움 봉착 가능성

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우리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 : 군사, 외교, 경제 역량 강화와 국민 내부공감대 형성

(1) 미국의 잠정 국방 지침: 핵 외, 재래식 위협에 대해 지역 국가가 대부분 부담

- 우주 첩보, 미사일, AI 등 “첨단 정밀” 재래식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 증액 불가피, 한미동맹은 핵억지력에 위주 역할 수용
- 재래식 무기의 생산, 혁신, 통합 공급망에 기반한 네트워크화된 방위산업 구축

(2) 외교, 경제 관계 유연성 발휘, 대중 관계 조정, 유럽, 일본 등 외교, 경제협력 강화 및 다변화

-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와 중국의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영향력 감안, 대응
- 일본, 호주, 인도, 유럽 등과의 협력 다변화로 강대국 압박 완충

2) 한러관계에 대한 창의적 단계적 접근:

가. 러시아와의 변화된 관계 모색과 한계:

(1) 푸틴의 2000년대 남북한 등거리외교에서 러북 동맹화의 러시아 국익 극대화로 변질

(2) 트럼프식 대러관계 개선 추진의 정치적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

나. 러북간 군사 교류 및 지원 문제와 북한군의 러 파병 여파

(1) 북한군 드론, 미사일 기술 제공 이후, 잠수함 기술 지원 시 한반도 안보불안정 야기 심각성

- 김정은의 핵 2차 공격력 확보 추구
- 파병 군인들에 대한 희생과 인명 경시 사례

(2) 파병, 무기 지원 교류로 러북 간 동맹의 정치적 관계를 차별적 강화

(3) 푸틴-김정은 간 금년 중 4차 정상회담추진으로 군사경제협력 확대 도전

다. 한러간 외교, 경제, 문화교류 관계회복 위해 러시아의 노선 조정 촉진 모색

(1) 대러제재 완화 결정과 호혜적 관계 개발로 관계회복에 대한 주도적 결정과 함께, 미러관계 개선의 가시적 조치, 푸틴과 집권 지도부의 북한 관계에 대한 한계 인식 등 고려

- 크레믈린, 1년 전 압류된 이태리 온수기 제조 회사의 러시아 복귀에 대해 사업의 소유 및 경영권 복원 허용 결정을 내렸으나, 타 서방 기업들의 이탈 과정 경험상 대거 귀환 여부는 현재 불투명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 관련, 유럽 입장도 고려

3) 대북 관계에 대한 초당적 일관된 입장 정립 모색 : 한반도 안보 대립의 완화
- 트럼프의 김정은과 직접 대화의 긍정적 효과 활용

끝

【토론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최 윤 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W-아카데미 원장)

○ 신범식 연구소장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훌륭한 분석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림. 본인은 주제와 관련한 국가 안보적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종전 협상과 관련하여 외교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인 것으로 이해됨. 아울러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됨.

2. 이러한 입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으로 우리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 특히 미국이 대만사태 등 중국 견제를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오로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중국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등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큼. 한마디로 한반도 안보정세의 지각 변동임.

3.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은전을 바라는 소극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봄. 보다 능동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즉 우리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어야 함. 그런 관점에서 대만사태는 우리의 능력으로 미국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4. 본인은 지난주(4.7-9) 미 해군연맹이 주최하는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대만사태 시 미국의 대응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하였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국의 군함 숫자는 2020년대 초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고 2030년이 되면 그 격차가 무려 140여 척이 될 것으로 전망함. 문제는 해군력의 열세보다 냉전 이후 미국의 조선, 해운산업이 몰락하며 유사시 군수물자 수송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임. 미국은 1960년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국적 상선대를 700여 척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80여 척까지 급감하였음. 그러나 천문학적인 정부의 보조금(10년간 1,300억 불)으로 수백 개의 조선소를 육성한 중국은 7,000여 척에 가까운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음. 참고로 한국전 시 미국은 255척의 상선을 동원하였음. 만일 대만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장거리 수송을 위해 엄청난 숫자의 상선대가 필요할 것이나 자국의 연안에서 전투를 벌일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임.

5. 미국의 조선, 해운산업이 이처럼 몰락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냉전 이후 이렇다 할 적이 없어지며 정부나 군의 지도자가 자만하고 무관심했던 결과임.

6.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후 '신 해양전략(SHIPS For America Act)'으로 이를 만회하려 하나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님.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 해운 능력으로 이 공백을 메꾸며 미국을 도와주어야 함. 이는 주한미군 임무 변경,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걸려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음.

7. 이를 위해서는 국내 조선, 해운산업이 당면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함.

【토론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개입 사례로 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이론적 분석틀—

신 석 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1. 개요

- 2024년 11월 21일 제5회 나지포럼에서 토론자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으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의 대외정책을 전망하면서 미국이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에 있어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개입주의를 지속하리라 전망하였음. 그 성격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al interventionism)'가 아닌 '비자유주의적 개입주의(Illiberal interventionism)'[1]일 것이며 수단의 핵심 내용은 다자주의가 아닌 일방주의적, 깊은 동맹이 아닌 거래 동맹이라고 진단하였음.
- 본 토론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과정에 나타난 트럼프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신석호 "국제정치학의 헤게모니 이론으로 본 미중 갈등" 북대북한연구회 편『김정은 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역사인, 2019) 제10장.

2. 주요 이론적 자원

□공격적 현실주의 :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 세계정부가 없는 아노미적 국제질서의 구조하에서 각국은 협력적이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자국의 힘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이론.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해결 과정과 관세장벽 구축 과정에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이어져 온 러-우 전쟁 자체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되므로 '손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글로벌 권력 구조의 다극화 추세를 인정하지 않고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등 강대국 중심 외교를 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장면에서는 펠레폰네소스전쟁사에 나오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하고 약자는 순응해야 한다"는 아테네군과 밀로스인 간 대화를 연상시킴.
-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나타내며 협상과 거래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지켜볼 대목임.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이론 :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예일대 교수

- 지역 패권 국가는 궁극적으로 세계 패권을 추구하게 됨.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미국의 경우 다른 지역, 유럽과 아시아에 경쟁적인 지역 패권국가가 등장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임. 이것이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예일대 교수에서 시작해 미어샤이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역외균형 이론임.
-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에서 중국이 지역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에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NATO와 맞서고 있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러-우 전쟁 종전을 추구하는 것은 '역(reverse) 키신저' 식 발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해석이 나옴.
- '역외균형' 이론은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우선 잠재적 지역패권국의 부상을 막도록 하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바다를 건너 개입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도 내포.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개입에 대한 비판은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1기-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져 오고 있음.

□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 로웰 디트머**

-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최근 부상하고 있는 미-중-러 3국 관계에 대한 분석은 1970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미-소-중 3국 관계의 상호작용을 체계화한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모델을 이론적 자원으로 할 수 있음.

> "어떤 상황 또는 조건에서 '전략적 삼각관계'가 성립되는가? ①3개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고 ②두 행위자 간 관계가 제3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③각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의 야합을 방지하거나 자신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전략적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안보문제가 걸려있을 때 그 관계를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2]

- 디트머는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행위자를 중추라고 부르는데,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등 현상을 변경하고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주도자(initiator)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대외정책 행태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임.

3. 한국에 주는 함의

- 이상과 같이 러-우 전쟁 종전 개입에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외정책은 현실주의적 이론체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일방주의와 즉흥적 정책 결정 패턴 등에 비춰 현실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 한국은 미국이 더는 '자비로운 패권(benign hegemon)'이 아니라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2 Lowell Dittmer, "The Sino-Japanese-Russian Triangle,"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10, No. 1, April 2005, p.1; "Bush, China, Taiwan: A Triangular Analysi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10, No. 2, Fall 2005, p. 12.

스스로 국제사회로 이끌어낸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안보 딜레마'에 빠진 '인색한 패권(stingy hegemon)'이라는 현실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미국이 '역외균형' 정책에 따라 중국의 지역 패권 부상을 막는데 핵심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미·중·러 전략 삼각관계의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와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이상〉

【토론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유 영 철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1. 러우 전쟁의 성격

○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

-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성격 자체는 서방 vs 러시아의 전쟁
- 우크라이나는 영토와 병력을 부담하고 전쟁 비용은 서방이 전담
-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가 서방으로부터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

○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에 러시아의 반발**

- 전쟁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

* 환원주의(reductionism)의 오류에 주의 필요

○ **전쟁 상황**

- 전쟁 초기 러시아의 침공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였으나, 현재는 러시아 주도의 전쟁이 지속

* 전쟁 개시 이후 러시아는 현재의 전선에서 우세를 고수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과 유럽 역시 지원에 한계를 보이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 반감

2. 러우 전쟁에 대한 미러 간 협상 상황

○ 협상 진행 과정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러 간 휴전에 관해 협상이 진행 중이나 난항 지속

○ 현재 협상 분위기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

- 전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자신들의 협상안을 고수하며, 미국과 서방을 압박
- 미국은 EU와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발로 인해 휴전의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견 주장

  * 실현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으나 러시아 수용 불가 천명

-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입장

  *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3. 러우 전쟁과 협상 과정에서 시사점

○ 북한군 파병과 북러 군사 관계 강화

-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군 파견을 보도하였으나 북러는 이를 부인함
- 국제적십자사는 러우 전쟁에 북한군 참여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 전무
- 북러 군사 관계의 강화는 러시아의 '국가 대전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러우 전쟁으로 인한 특수성에 의해 파생된 결과

  *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및 우주 관련 기술 이전에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동북아 역내 전략 균형을 깨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

○ 한국의 자체 핵무장 재점화

- '우크라이나가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가정하에 핵무장 필요성 논의 대두

  * 미 대선 기간 중 트럼프 측 안보 전문가의 한국 핵무장 가능성 발언

-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는 없음
*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에 한국은 서명, 비준 완료

- 국내 정치적으로도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 핵실험 장소, 고단위 폐기물 저장 장소 선정 등

○ 주한미군 철수 우려

-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보고 주한미군 철수에 우려하는 견해 확대
-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전략적, 지정학적 관점으로 볼 때 중국 견제가 1차 목표인 미국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4. 결론

○ 러우 전쟁은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에 중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

-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러시아 측의 안이 다수 수용될 가능성 높음
- 러시아의 국가 대전략인 '다극화 국제질서' 실현 가능성

○ 북러 군사협력 약화 노력

-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군사 관계 협력 강화
-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경제, 문화 교류 등을 먼저 실행
- 향후 미러 관계의 추이에 따라 적절한 전략 수립

【다자토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사회 :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유영철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전인찬 외교부 정책보좌관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W-아카데미 원장

▣ **백승주 회장** : 신범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주일 내에 끝날지,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질지, 혹은 트럼프가 새로이 개입하며 어떤 측이 유리한 국면에 올라설지 등에 더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시며,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교적 입장과 관련하여 서방과 러시아 간의 균형을 어떻게 지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박노벽 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는 미국,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럽의 역할과 입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도 이 과정에서 긴장과 협력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준비하신 발표를 바탕으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과 입장에 대해 중심적으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노벽 대사** : 무엇보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승주 회장님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내외적으로 다소 피로감이 누적되며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중대한 국제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전쟁기념관 회장으로서의 깊은 통찰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공감하며, 저 역시 그런 취지에 동의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신범식 교수님께서 매우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고 구체적인 발표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세계 질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종전 협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이와 관련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협상 접근 방식에 있어 '균형적'이라는 표현이 자칫 1:1 등가적인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다변화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전략적 다변화'로 환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결정적인 차이는 한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략적 중심축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비용이나 안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가 존재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핵무기의 실질적 억지력과 사용 가능성 문제는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인 함의를 주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푸틴 대통령의 생각처럼 전쟁이 단순히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함으로써 정치적 항복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즉, 한 번의 군사적 승리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위험하며, 현실과는 거리가 먼 판단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이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결단을 갖춘 국가를 쉽게 굴복시킨 예는 드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며,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등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만 하더라도 불과 3년이었던 기간 동안 얼마나 복잡하고 긴박한 전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쟁

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질적으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핵무장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전쟁의 장기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을 상당 부분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때가 종전의 기회였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만약 그 시점에서 전쟁을 멈췄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전 양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의 판단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려는 결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한반도 북진을 시도했던 경험과도 일정 부분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전쟁을 중단했어야 했다는 날카로운 비판은 오늘날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중요한 반성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크라이나가 전진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러시아 현지 군 지휘부 내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내용을 미국이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대로 밀어붙이다가는 유럽 한복판에서 실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암시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갔습니다. 지원을 명시적으로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무기나 장비의 전달 속도를 늦춘다든지,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원 강도를 낮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초기의 전과(戰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전세가 다시 러시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수 지원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부터도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받으며 반격을 이어갔고, 결국 현재와 같은 교착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핵무기를 통한 위협이 일정 부분 실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언론 차원에서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있었던 이 '불

편한 진실의 순간'은 전략적 판단과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외교적 수모를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반발심이 커지고 있고, 그 결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다시 결집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대선을 실시하여 정권 교체를 시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여론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국민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결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리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쟁 지원에서 점차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기나 물자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 확보해 두었던 예산 잔액의 일부를 활용해 간헐적으로 소규모 지원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며, 전략적인 지속 지원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은 최근 들어 재무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올해 약 2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총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2014년 민스크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와 유럽 간에 깊어진 불신이 있습니다. 당시 협정을 통해 일정한 평화적 공존의 틀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후의 전개는 러시아가 서방과의 공존보다는 대립과 충돌의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유럽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불가피하게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최근 메르츠 신임 총리가 상당히 강경한 반러시아·친우크라이나 노선을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정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장기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개입이 필수적인 요소

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위성 기반의 군사 정보, 정밀 감시 능력, 전략 수송기 등 일부 핵심 군사 자산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은 유럽연합이나 NATO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참여 또는 지원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이 점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유럽 안보 구조 재편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럽이 아직 미국이 보유한 핵심 군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향후 유럽이 미국의 실질적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는 유럽 내부에서도 매우 중대한 논의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비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여러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의지'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GDP는 러시아에 비해 약 8배가량 크며, 경제력 측면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 예산이나 교육 예산과 같은 기존의 주요 재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럽 각국 내에서 군비 증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에서는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속도와 구체적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 역시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 측에서도 "유럽 내에서만 투자하라"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자국 중심의 생산 유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은 일정한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군사적 대응 역량을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과 관련하여 신범식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해석, 즉

구조적 변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세계 패권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2016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그즈음부터 실질 구매력 기준(PPP)으로 볼 때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서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흐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를 일으키며 오늘날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으나, 실제로 얼마나 실효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은 국방 예산 감축을 추진 중이며, 향후 5년간 약 4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8%씩 감축되는 규모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중국을 상대할 정도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거 미국이 담당하던 안보적 역할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현재 핵 억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확충 등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의 복지나 교육 등 타 분야의 재정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재정 이슈를 넘어선 국제정치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종의 '악역'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는 문제 인식에 있어서는 매우 명확하며, 기존의 국제질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질서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접근을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실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동맹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협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외교 접근법은 일각에서 '리버스 닉슨 전략'—즉, 중·러 관계를 이간시키고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시도—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동맹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혼란의 가능성은 결국 우리에게도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종전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범식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만약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영토 양보, 즉 크림반도나 점령지에 대한 인정이 제시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전쟁을 벌였으며, 왜 수많은 청년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헌법적으로 국가의 영토를 지키라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양보를 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그 압박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럽은 이러한 역할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재무장을 진행 중이며, 각국 군대의 통합을 통해 빠르게 군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특히,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발트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도 군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폴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군사적 참여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럽은 자체적인 군사적 준비와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럽이 신속 배치 가능한 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럽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현재 AI 및 정밀 타격 무기들의 발전에 따라, 분쟁 지역 근처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 등지에 소규모 군대를 배치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 안보를 각국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주요 교훈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력 균형 등의 가치와 제도가 과거에 비해 강대국의 이익과 그들 간의 균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둘째, 군사적 역량, 외교적 역량, 경제적 역량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 지침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안보 문제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정밀 무기와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의 경제적 교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외교 및 경제 분야에서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내부 엘리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실패한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하에서 이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포스트 푸틴' 시대에 대한 고민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적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기술 및 군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지연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인센티브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주 회장** : 먼저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핵무기가 단지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자체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을 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맹 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EU에 대한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의 태도에서 '무한히 아낌없이 주는 동맹'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최근 최윤희 합참의장님께서 미국을 두 번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트루먼 손자를 만났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미국 해군의 무기 담당자와 회동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빠른 종전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해상 군함의 총량 비교를 통해 두 나라 간의 군사적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장님께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최윤희 총재** : 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다 전해버리면 제 할 일이 없겠죠. 사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나지 포럼에 참가하는데, 이 포럼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바로 방청객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럼이나 세미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소수 정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발표하게 되니, 사실 굉장히 긴장됩니다. 다만, 저를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발표나 토론을 하시는 분들 모두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저 혼자 긴장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범식 교수님이 작성하신 발제문을 면밀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셨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적, 외교적 관점보다 군사적 차원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군사적, 국가 안보적 교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힘이 없을 때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힘이 없는 국가는 강대국들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강대국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잠재적인 전쟁 가능성, 즉 국가 안보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미국이 과연 얼마나 우리

를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급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도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범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자는 주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외부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미국의 군사적인 역량 또한 매우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 정책 차관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는 이제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더 이상 이를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까지도, 만약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쪽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고 국제 공급망 및 외교적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 해군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 질서를 세우고 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 시설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덕분에 미국의 국제 질서에 편승하여 세계 경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듯이, 저는 최근 미 해군 연맹이 주최한 방산 전시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포럼을 참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정책의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에 취임한 존 팔렌(John Phelan)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급박함을 강조하며, '한국을 빨리 방문하여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현재 미국의 해양 통제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15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국가였으나, 청나라의 해금 정책과 아편 전쟁, 청일 전쟁 등을 거쳐 약 100년에 걸쳐 수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의 등장 이후, 중국은 대륙이 아무리 크더라도 해양 통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해양 팽창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인공섬을 만들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내해로 간주하는 등, 바다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약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선소를 대대적으로 육성했으며, 수백 개의 조선소에서 군함과 상선을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대 초반에 중국의 군함 숫자가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그 차이는 2022년 85척에서 2030년에는 그 차이가 14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중국은 군함만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선도 엄청난 속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동안 미국은 상선 5척을 건조한 반면, 중국은 1,700척을 건조했습니다.

상선의 역할이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는 데 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바다에서 통상 질서를 확립하고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선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6·25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255척의 상선이 동원되어, 방대한 물자가 운반되었습니다. 걸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백 척의 상선이 군수 물자를 수송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상선의 건조를 급격히 확대하여, 현재 약 7,000척의 대규모 상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인 목적을 넘어서, 군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만약 국가의 명령이 내려지면, 이 상선대는 군수 물자를 실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1960년대에 700척의 상선을 보유하며 세계 최강을 자랑했으나, 냉전 이후 조선 산업의 몰락으로 현재는 약 90척으로 감소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거나 대만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대만까지 1만km가 넘는 거리를 원정 작전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군수 물자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가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군함의 숫자도 부족하고, 군수 물자를 실을 상선도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몰락한 원인은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을 붕괴시킨 후 자만에 빠져 산업 지원을 중단한 데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며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고,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조선소는 5곳에 불과합니다. 이 산업을 복원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인식한 바이든 정부는 신해양 전력 정책을 통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조선 및 해운 산업을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실정이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 문제에 편승해 발전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전 계획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거쳐 막대한 군수물자가 운반되어야 합니다. 병력 수십만 명, 전투기 수천 대가 한반도로 수송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이 모든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모든 군수 물자 수송은 미국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은 지금 그 자체로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물자는 물론, 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과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상선대를 강화하고, 해기사 양성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해군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함을 말씀드리는 것이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 미국이 압력을 가해도 러시아, 중국과 같은 큰 나라들, 그리고 EU가 그 압력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말 잘 듣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음으로는 우리 유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영철 박사님은 1996년부터 2000년대 초, 그리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대러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발제문을 쭉 읽어보니, 유영철 박사님은 북한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내재적 접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의 토론문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특히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 대한 접근을 내재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영철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 **유영철 센터장** :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은퇴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

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범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나, 발표 자체에서 더욱 깊이 있는 조언과 심각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매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노벽 대사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 오늘 가장 놀랐던 부분은 최윤희 회장님께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미나와 포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다루는 발언을 하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에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여전히 막강한 국가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의장님께서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을 따지자면, 아마 20년 또는 30년 후에야 완벽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거나 서방의 압력에 의한 침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재적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비교하면, 러시아는 우리에게 차이콥스키와 톨스토이의 나라로 익숙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더욱 생소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에서 독립할 때,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은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들을 유럽에서 제2의 프랑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을 넘고, 면적은 유럽에서 가장 큽니다. 프랑스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소련 시기부터 이전되어 왔던 방위산업, 과학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프랑스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 해체 이후 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한 번도 자체적인 역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역사를 가지지 못했고, 이는 스스로를 통치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 주변 국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점령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카테리나 2세 시절에는 현재의 돈바스 지역을 포함하는 '노보 로시야' (Новорос

сия, Novorossiya) 또는 '뉴 러시아' (New Russia)라고 불리는 지역이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몰락 원인에 대해 미국 학자들은 대체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나치게 부패하고 무능력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의 배경에 대해, 제가 컬럼비아 대학교 해리만 연구소(Harriman Institute)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당시,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는 크림반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슈나이더 교수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는데,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능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이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서방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러시아는 곧 붕괴할 것이다', '러시아 지상군은 괴멸될 것이다', '러시아는 자금을 동결하면 자멸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푸틴 대통령이 다리를 떨며 신경계에 이상이 있다는 등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 매우 단기적이고 단순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랄산맥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월급이 천 달러도 되지 않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탈린 시절, 러시아는 집단 농장과 산업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는데, 집단 농장은 실패했지만 산업화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러시아의 산업화는 우리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대규모 전쟁 물자를 생산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분석은 더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공업 생산량과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제 와서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신교수님, 최 의장님 그리고 대사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어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러 전쟁과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

이 뭘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북한군 파병과 북러 군사 관계, 지금 많은 분들이 북러, 북한의 군인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해서, 즉흥적으로 파병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복잡하게 처음에는 폭풍 군단이라는 막강한 북한의 전력이 투입됐다고 이야기하다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아주 나약하고 체격도 작은 소년병들이 가서 포탄의 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북한군 포로라고, 북한군 시체라고 어떤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희박해요. 또 국제 적십자사에 북한군 포로를 잡았으면 신상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된 건이 한 건도 없고, 시체를 교환해야 하는데 북한군 시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북한군 파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제가 지난 8월 30일에 지난해 북러 군사 관계에 대해서 그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북러 군사 관계가 포괄적/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북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우주 그때 뭐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북한이 군사 위성을 갖다가 쏘는 데 실패를 했는데 북러 군사 협력이 조약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2주 만에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줬을 거다, 우주 기술을 줬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글쎄요. 러시아같이 이때까지 지난 300년간 유럽에서 중요한 외교를 담당했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광대한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과연 북한에 그런 지원을 해서 지금 전략적 균형을 깰 만한 그런 지원을 할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로서는 지금 서쪽만 해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동쪽에 북한이라 별 쓸데없는 나라에 우주 군사 기술을 주고 미사일 기술을 줘서 대기권 진입에 성공하게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관계는 우리가 협력/협정 조약에, 사실 협상이라는 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러시아가 손해 보면서 협상을 갖다가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한국의 자체 부정이 재점화되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다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러시아가 침공했을까, 소련 시절에 했던 핵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소련 시절에 그런 것은 쓸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그 지역에 담당하는 사령관이 함부로 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의 어떤 핵무기들은 절대적으로 모스크바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거라도 없애야 하므로 넌-루거 법(Nunn – Lugar Program)에 의해서 비용을 미국이 내고 그걸 다 해체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그런 문제가 또 재점화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핵무장은 첫째, 국제사회를 갖다가 설득시킬 만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콜비, 그리고 폼페이오가 대선 기간 중에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 한마디가 너무 꿈의 센터라는 것이죠. 주변국을 다 설득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 주변국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핵실험을 한 번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까지는 6번의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6번 했거든요. 7차 핵실험이 있을 거라고는 자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7차까지는 가지는 않았죠. 6차까지만 갔습니다. 우리가 핵실험을 6번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CTBT에 가입돼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포괄적으로. 아무 데도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식으로 땅굴을 깊게 파고 거기서 핵실험을 하자? 어느 지역에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강원도니까 강원도에서 하자 6번을. 강원도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라늄 농축에서 고단위 우라늄 농축을 한, 이걸 갖다가 방폐장은 또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면서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맹은 친구가 아니죠. 동맹은 환경과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충분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우리 의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평택 기지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적 요충지라서, 평택 기지나 오산 공군 기지나 군산의 공군 기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미국이 철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지금 96년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있다가 22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참 진부한 대답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강화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신범식 교수한테 차라리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발표를, 근데 그걸 말하는 것도 이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야생이라는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철저하게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건 지, 아까 백승주 회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그걸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종전이 솔직히 말해서 EU가 이제는 전쟁 그만하자 해서 미국에 대해 요구할 줄 알았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역전이 돼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은 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주 회장** : 다른 거는 몰라도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시각에서 다룰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비밀 문제는 접근이 제한적인 것이라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공식 토론자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신석호 박사님께 부탁드려야 되는데 전인찬 박사님도 조금 나중에 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외교부 장관 특별 정책 보좌관님이 자리를 함께하셔서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해서 토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정책 보좌관을 토론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석호 박사님께 먼저 토론을 드리고, 신석호 박사님 토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쁘실 텐데 현직 언론인으로서 신범식 교수님 논문을 읽고 또 읽은 것 같아요. 신범식 교수님 논문에 대해 저명한 많은 다른 학자의 이론을 빌려서 비판적 검증과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대외 정책에 대해, 자비로운 패권(Benign Hegemony)에 상반되는 '스팅지 헤게모니(Stingy Hegemony)'를 '인색한 패권'이라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1등은 유지하고 싶은데 돈을 쓰기 싫어하는 정책이라고 신범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스팅지 헤게모니(Stingy Hegemony)라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 신 박사님 스팅지 헤게모니(Stingy Hegemony) 전략 전술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석호 이사** :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선배님께서 현실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잘해줄 것으로 제가 믿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론적으로, 이론적인 개념을 갖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토론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론을 가지고 좀 모호하죠. 현실이 좀 간단하게 보이는 뭔가 제가 처방책도 좀 데리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작년에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라는 이제 당대 최고의 지역학자도 있고요,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의 요지는 어떤 국가가 어떤 대외 정책을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답을 두 가지를 냈거든요. 기준이 하나는 그것이 이론에 근거하는가, 그리고 그 이론에 근거한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히 심의했는가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 러우 사태 해결에 끼어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이론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과, 그것이 지금 우리 함의가 어떤 거냐 하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이론인데 신범식 교수님도 현실적 1위 강대국 전략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맥락인데 이게 이제 국제정치에는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 하에서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의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하게 되고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실질적인 힘의 유무는 떠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쨌든 미국의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고 지금 전쟁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손절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가 다극화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을 유지하겠다, 수단에 있어서는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젤렌스키를 2월에 막 대하는 걸 우리가 다 봤지만 상당히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그런 상대역을 연상시키죠. 강자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고 약자는 그걸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 그런 것들로 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최윤희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말은 그런데 과연 힘이 있느냐 힘이 계속 쇠퇴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좀 세게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어떤 유일 초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그런 몸부림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은 군사력과 안보 정치가 우위인 거죠. 경제 협상 이거는 세컨드 레벨로 내려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전쟁 안보 이런 거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

리고 거래적인 접근법, 경제를 강조하고 하는 점은 좀 이 이론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외 균형 이론이라는 것인데 신범식 교수님이 대중국 견제에 집중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죠. 이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개입에서 조금씩 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줄여온 것은 바로 오바마 정부 때부터잖아요. 오바마 정부가 우리가 좋은 망치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곳을 박을 수는 없다고 이미 제가 워싱턴 특파원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로 가면서 계속 개입을 줄여오는데 개입을 줄이고 줄이면 그래서 적절한 개입은 뭐냐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게 오프쇼어 밸런싱(Offshore Balancing, 역외 균형)이다. 뭐냐 하면 미국은 미주의 지역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경쟁할 만한 지역 패권 국가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이제 '역외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이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지금 동원한다는 거가 이제 역(reverse) 키신저 발상이라는 말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게 말대로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가지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발트 3국이라든지 그 약한 고리 있잖아요. 폴란드로 가는 회랑, 그런데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마지노선을 계속 앞당겨 가면서 하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유럽의 지역 패권 국가가 되려는 러시아에 또 대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 교수님의 말씀 중에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속단하기는 이르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끌어낸 거잖아요! 1970년대 핑퐁외교를 통해서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고 중국을 끌어냈는데 그 끌어낸 중국이 지금 너무 커져서 이젠 중국을 막으려고 다시 또 러시아와 관계를 한다는 거를 어쨌든 전략적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신범식 교수님 발제문에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또 협력하잖아요. 계속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 중국을 끌어내서 소련을 막은 것처럼 이번엔 삼각관계에서 러시아를 끌어내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이 주는 함의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한국이 균형점을 스스로 잡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대목입니다. 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오랜 역사를 한번 일별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계속 외교 정책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권을 계속 바꾸면서 오락가락 한 걸 제가 역사책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은 100% 찬성을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2기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모두에 말씀드린 이게 내부에서 지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정책을 펴는 건지 좀 관세 정책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방적이고 이게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즉흥적인 패턴, 과도한 일방주의 그리고 능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백승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여간 미국이 든든한 후원국으로서 계속 한국을 이렇게 퍼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을 마냥 기대하던 시대는 갔다는 거는 대체로 동의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인색한 패권국과 미국과 어떻게든 지내면서 우리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역외 균형 말씀드렸지만 역외 균형의 관점에서 미국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다른 거죠. 미국에게 우크라이나보다 한국은 훨씬 더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바를 이제 다 더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미국의 그런 글로벌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예 신석호 박사님 정말 진지하게 토론 준비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 교수님, 신범식 교수님 또 신석호 박사님 모두 오늘 하는데 균형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한미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전인찬 보좌관님, 그래도 오늘 들으시고 한 말씀 먼저 청중석에서 포문을 여는 형식을 빌려서 한번 하시죠

▣ **전인찬 보좌관** : 발제하신 분들 너무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우리 백승주 회장님은 국회에 있을 때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오래 모셨고 또 국방 차관도 하셨고, 외교 업무 분야의 최고 스타이자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윤희 회장님은 제가 ROTC 대위로 있을 때 별 4개를 달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너무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초 발단인 크림반도 영토 주도권 확보 때문에 발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제정치의 논리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논리는 국제정치는 강자는, 강대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것이고 약자는 약소국은 힘이 없기 때문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국제정치의 영원한 논리인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전세 보도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조만간 결국에는 트럼프와 푸틴의 회동에서 철군 등 종전의 제반 요건이 논의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보적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대응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를 보고 또 우리 외교부에 또 문헌이 없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박노벽 대사님께서 계실 때 그 밑에 공사를 하셨던 분인데 박병환 공사라고, 그분이 2016년도에 외교부를 그만두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유라시아 전략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께서 쓰신 책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봐야 한다'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오기 전에 쭉 읽어보니까 좀 이분이 러시아에 4번을, 외교부에 계실 때 가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상입니다.

▣ **백승주 회장** : 홍보해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니.... 여러분 박병환 교수님 그런 좋은 책을 썼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분이 발표를 하고, 네 다섯분이 1시간 40분, 100분 토론을 하면 진이 좀 빠지는데 굉장히 빨리 우리 100분 토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

서 한 분 한 분 또 토론한 거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교수님이 좀 대답하는 토론의 정형화된 형식인데, 100분도 지났고 그렇게 해서 청중석의 질문을 한두 분 받고, 종합해서 교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포럼의 핵심은, 제일 새로운 방식은 리셉션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토론자와 발제자와 청중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두 분, 토론 먼저 손드신 분, 뒤에 계신 분. 질문만 딱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A)

▣ **청중1** : 저는 여기 자주 오는 그냥 서울 시민인데, 신 교수님 말씀 중에 창조적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그 창조적 전략보다는 창조적 정책을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에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다가 넘기고 우크라이나를 중립지대로, 이제 광물 협정 그대로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구상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유럽 전체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전체가 또 핵무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숨은 뜻인지도 모르죠.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골치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사태를 방기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빨리 그 점령 지역을 유엔 관리로 넘겨야 합니다. 중국군이 사령관직을 맡는 유엔군이 들어오도록 하고 점령지를 우크라이나하고 공동개발하고 우크라이나는 스위스식 중립 국가로 만들고, 국제적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NPT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세계가 나아갈 길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아마 좀 참조가 되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청중2(김유석 학예연구관)** : 저는 전쟁기념관에 근무하는 김유석입니다. 신 교수님 이번 주에 가까이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고견을 듣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제 질서라든가 국제 관계에서 어떤 기준이나 가치의 변화가 오는 것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연계해서 EU 지역,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이탈 가능성, 반발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국제 관계에서의 지금까지 질서나 가치 기준은 사실 1648년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국가의 주권, 그다음에 국가 관계에서 주권의 평등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암묵적인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대립에서 같은 진영 간에 서로 협업하는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죠. 또 그 뒤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또는 독재 국가 간의 대립에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자기 진영끼리 협업하는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적인 침략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침략을 당한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제가 되는 이런 공통적인 개념이 성립이 돼 있고 유지가 돼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접근법은 그런 것들을 상당수 이탈한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명백한 침략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한 국가와 합세하여 불법 침략국을 응징하기는커녕, 반대로 러시아는 영토 측면에서 이익을 얻게 되고, 푸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다음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지되온,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에 상당수 위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 앞장서서 끌고 간다라면은 그럼 과연 앞으로 세계가 그런 형태로 아예 바뀌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인찬 박사님께서 강자는 강자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약자는 거기에 희생당하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앞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와 연계해서 상상입니다만, 미국이라는 큰 축,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큰 축, 러시아라는 큰 축이 있을 때 거기에서 또다시 이탈된 EU라는 어떤 축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런 가능성은 어떤지,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EU 국가가 중국과 손잡고 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EU와 미국과의 관계가 기존처럼 그렇게 돈독하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주 회장** : 예 지금 제기된 질문들하고 앞에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 공식 리셉션 시간은 5시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신범식 교수** : 제 발표 자료 중에서 그림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거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이 모자란 부족한 발표를 이렇게 참 내밀기가 창피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기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토론자 명단을 뒤늦게 알려주시거든요. 처음에 이런 분들이 토론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세요. 내가 발표 한번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토론자 명단을 주시는데 박노벽 대사님이 여기 전 주러시아 대사로 돼 있으시지만 우크라이나 대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대사를 다 하신 분이시죠. 최윤희 총재님은 아시다시피 군의 전문가시고 저는 사실 잘 이제 모르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신석호 박사님, 영철 또 선배님 제가 아마 이 토론자 명단을 봤으면 아니 제가 안 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은, 일은 저질렀고 물은 쏟아졌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분 토론해 주신 걸 들으면서 저는 그냥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빼곡히 메모를 했고 열심히 학습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있으셨던 부분에만 그래서 집중을 조금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론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론이고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덕은 설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설명력과 그다음에 간결성, 할시머니(parsimony) 그리고 예측력 이게 이제 결국은 이론의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지금 사실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보고 국제정치 학자들도 되게 고민스러워해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유행한 이론은 신냉전 이론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이론이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신의 관계에 집중하는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서방 세계가 한 축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민주 반서방이 또 하나의 축이 돼서 두 세력이 충돌하는 냉전적 구조와 유사한 세계 질서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부상을 했던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건 이게 러시아와 중국도 영원한 동맹일 수가 없다는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전략 자체도 이렇게 냉전 구조 안에서 굉장히 나눠진 편 가르기 속에서 이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미국이 지금 하고 싶은 것들, 건져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도 계속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었던 우리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신냉전적 사고가 작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북한도 러시아에 접근하게 됐던 중요한 배경이 이런 신냉전적 사고 구조 속에서 차라리 러시아와 중국 중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주고, 받을 게 생긴 러시아랑 밀착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바이든 4년 시기 중 3년이 지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도 러·중이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으로 변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지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이 동맹하는 아시아판 나토 체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서는 어렵다는 거를 이미 미국도 점차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을 빼면서 이 구조로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도 러중이 밀착해서 미국과 함께 한 판을 뜨는 구조로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북한이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다음 수를 보고 있는 정책들로 러북 관계를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도의 밸런싱을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중재자 역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서 미국이 트럼프 시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냉전처럼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이게 정연한 진영이 나눠지는 구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다의적이고 대칭적인 상호작용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고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서 우리의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안 맞아 들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당황스러워지는 측면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 미국 정부의 행동을 우리가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거 이런저런 질서 생각하지 말고 강대국들이 자기중심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다극화 질서라는 것이 대세가 될 거고 각자도생에 이런 것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의 강대국 정치를 이제 예상하는 그런 종류의 관점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미어샤이머나 이런 종류의 학

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지만 근데 이 정책도 문제는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고 있는 변화들을 포착해 내지 못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글로벌 사우스가 소위 말해서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를 그렇게 와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글로벌 사우스,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떨거지들 정도였던 그 제3세계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 다음에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면서 이거를 좌초시킨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강대국 정치 시각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켄베리나 이런 학자들이 그러니까 진영 간의 대립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데 제3의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 형태의 세계 3분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나가고 싶어 하는 학자들은 사실은 각 지역마다 이 강대국들이 자기의 어떤 영향권을 관할하는 형태의 다지역 질서 또는 다질서 세계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논의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잘 설명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이 힘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정신을 바싹 차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하나의 이론적 시각이 확실하게 잘 드러나 봐야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정책을 세우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경쟁하는 이런 관점들이 결국은 힘의 변화의, 힘의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어떤 한 시각이 힘을 얻어 가고 그거에 보강하는 다른 논리들이 붙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 사실 가치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그 답 안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저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혼돈의 시기 국제 정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 가치를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오죽했으면 답답해서 도리어 학창 시절에 읽었던 정치사상 책을 다시 돌아가서 읽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책이 라인홀트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현실주의 그 학자였지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은 가능하고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게 집단의 수준에서 봤을 때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장 속에서 가장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는 힘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그나마 아주 처참한 결과들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치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혼돈스러운 국제정치로 가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이 힘의 균형 상태를 어떤 식으로 맞춰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향을 좀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답들을 대신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예, 신범식 교수님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대학원 시절로 돌아가서 강의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우리가 러우전을 보는 시각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분 세계론의 B.Shin 신범식 교수님의 약자입니까? 신범식 교수님 맞죠? 그래서 내가 3분 세계론을 딱 보니까 B.Shin 하고 Ikenberry 교수인데 신교수님의 주장이 3분 세계론? 제가 이거 잘 찾죠. 각주 잘 봤습니다.

▣ **신범식 교수** : B.Shin이 저 맞습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는데 네 예리하십니다.

▣ **백승주 회장** : 본인이 주창하는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론 속에서 균형적 관점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미일, 한미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영철 박사님 이론하고도 서로 이렇게 이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국가 이익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발제 맡아주신 데 감사드리고 토론 참여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청년 여러분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이렇게 같이 해줘서,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까 최윤희 의장님께서는 청중이 적다고 그러는데 저는 학회 토론회 가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군에 행사할 때 많이 오지만은 이렇게 진지하게 끝까지 있는 청중이 많은 프로그램을 찾기 힘들고요. 오늘 청중 좌석이 좀 적었지만 이걸 특별히 기획해서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월간 신동아에 오늘 토론한 내용들이 등재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아에서 또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먼저 참조를 해 주시고, 어쨌든 다음 또 토론회

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시지 마시고 다이어트용 저녁 식사 겸 파티가 준비돼 있습니다. 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KWO 나지포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발 행 인 백승주
발 행 일 2025년 4월 25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046
편집위원장 서진아
편 집 위 원 김유석, 김홍희, 신유진, 강지나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